

## 최근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특징

- 최근 우리사회 소득분배구조 악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 분위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낮고 고소득 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높다는 것임

- 2000년대 들어 취약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소득의 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빈곤층의 구성 측면에서는 취업가구원이 있는 빈곤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

- 2/20분위 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범주적 현금급여제도의 시행을, 그리고 5/20분위에 대해서는 현금급여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 서론

□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구조 변화를 둘러싼 지난 수년간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한국사회의 분배상태는 과연 악화되었는가?
- 분배구조의 악화는 새로운 현상인가?: 분배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그것은 경기침체시에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양극화라는 용어는 그러한 변화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가?
-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성장률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분배 악화를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가?

□ 분배구조의 변화를 보여줄 데이터의 시계열이 늘어나고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면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이견은 상당히 해소된 상태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는 분명히 악화되었고, 특히 2003년 이후 분배구조 악화의 새로운 경향이 보임. 이러한 경향은 최근 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음
- 특히 지난 10여년간 중산층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

□ 이하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구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배구조 악화와 관련된 핵심적 특징들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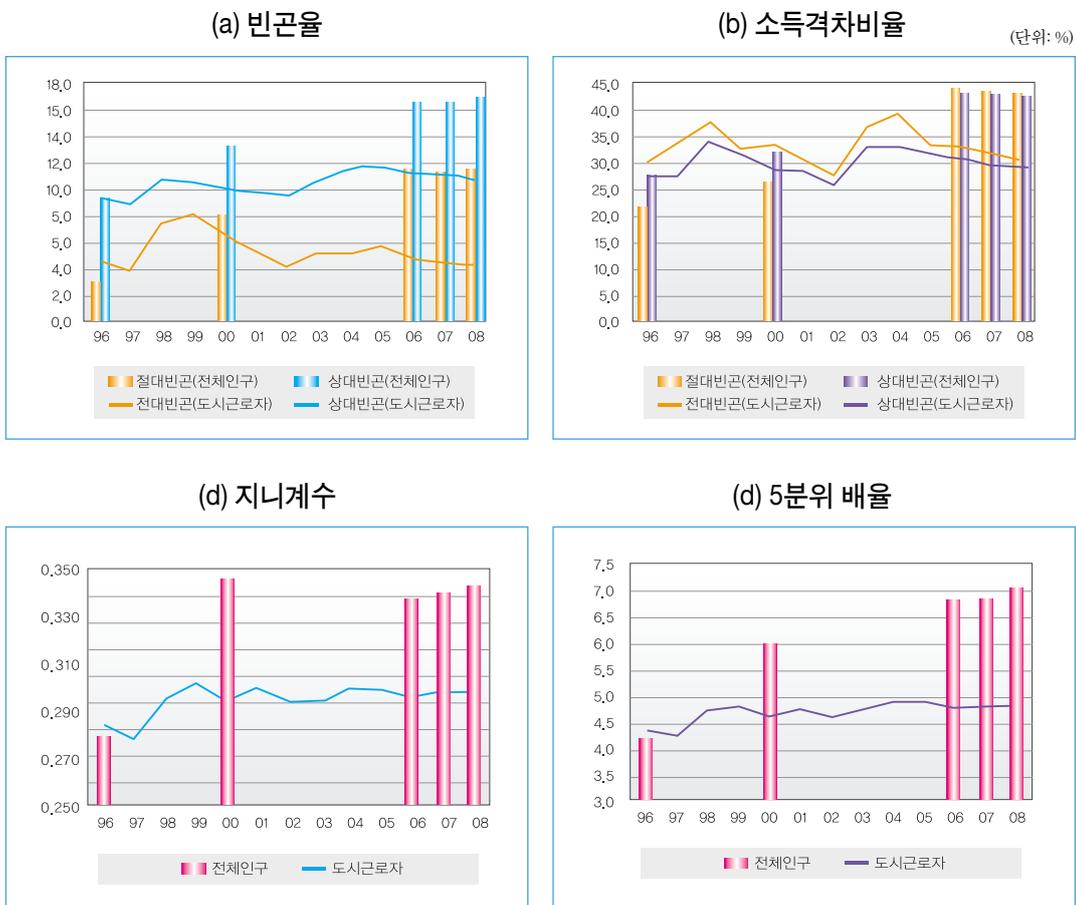
## 2. 분배상태 악화의 현황

### □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아래의 [그림 1]에서 실선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막대 그래프는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주요 분배지표를 보여줌

○대부분의 분배지표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악화되었으며, 소득격차비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그림 1] 주요 분배지표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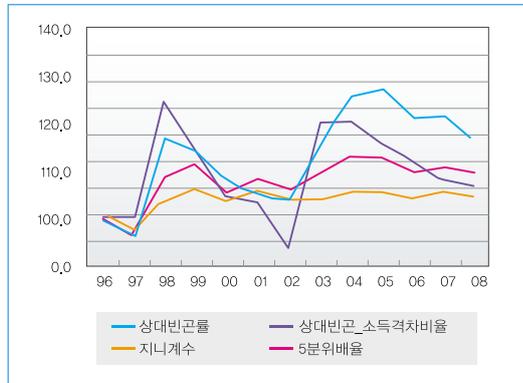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각 지표별로 1996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비교할 경우 상대빈곤의 악화속도가 가장 빠르고 다음으로 5분위 배율 - 상대빈곤 소득격차비율 - 지니계수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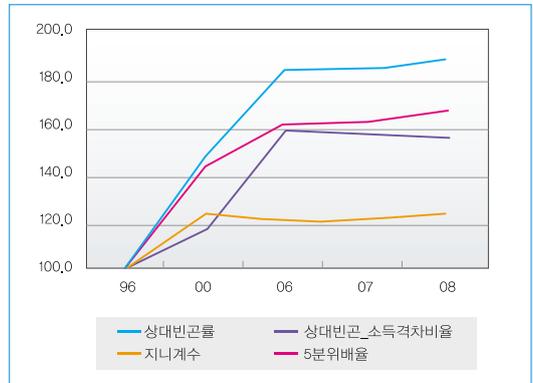
○1인가구를 포함한 경우 상대빈곤율의 증가 추세가 더욱 분명해짐

[그림 2] 빈곤과 불평등 지표의 변화 추이 비교(1996년=100)

(a)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b) 1인 포함 전체가구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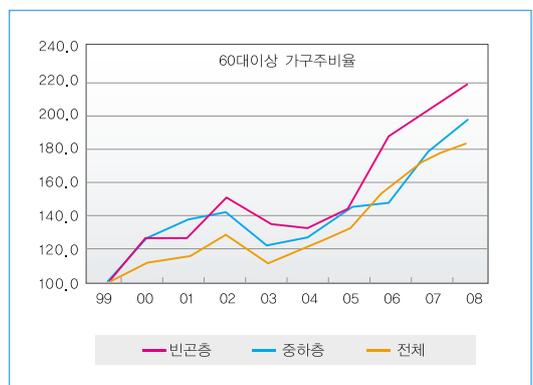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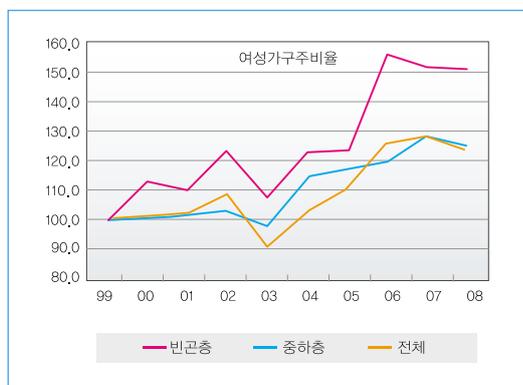
□ 중산층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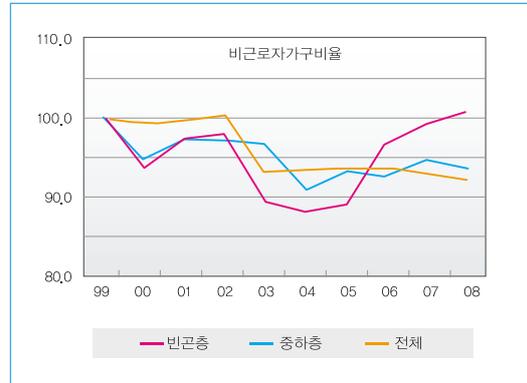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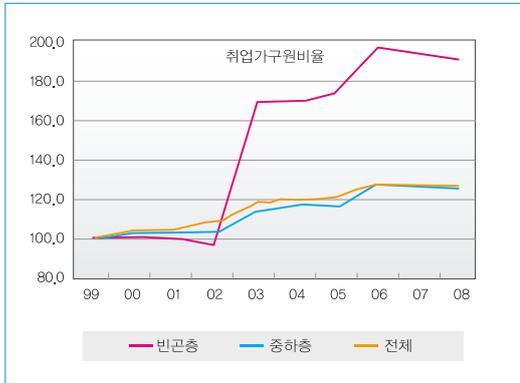
- 절대빈곤율은 다소 줄어드는 반면 상대빈곤율은 증가하는 추세
- 이는 중위소득의 40%에서 50% 사이의 소득을 얻는 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이 중산층의 위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 빈곤층의 구성변화

- 상대빈곤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빈곤층의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곤층과 중하층의 여성, 고령 및 비근로자 가구주 비율과 가구 내 취업인원 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봄(그림 3)
- 빈곤가구에서 취업가구원이 있는 비율의 증가속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빠름. 이는 근로빈곤(working poor)의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
- 여성가구주와 60대 이상 고령 가구주 비율의 증가는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빈곤층에서 그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남

[그림 3] 도시가구 빈곤층과 중하층의 가구주 특성 변화 속도 비교(1999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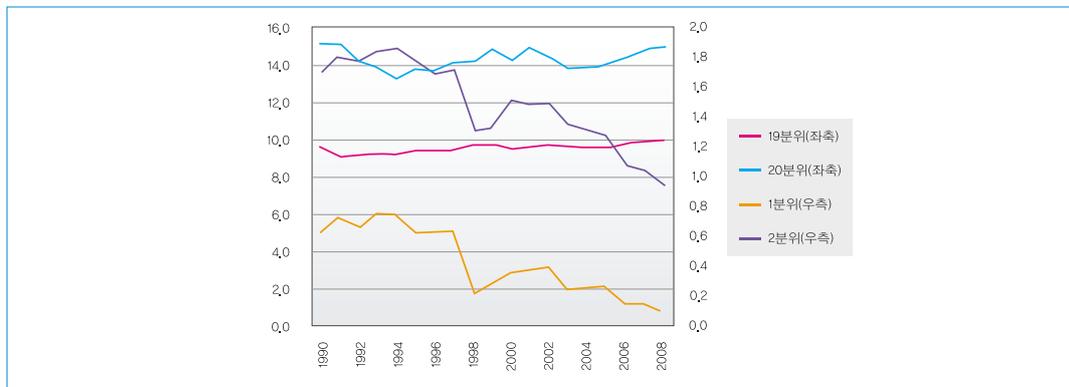
### 3. 빈익빈 부익부 현상

#### □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 증가

- [그림 4]는 시장소득에 따라 2인 이상 도시가구를 20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최상위와 최하위 각각 두 분위의 소득 점유율 변화를 보여줌
- 이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배율 확대는 빈익빈만이 아닌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임을 알 수 있음(특히 2005년 이후)

[그림4] 도시가구 상위 소득분위의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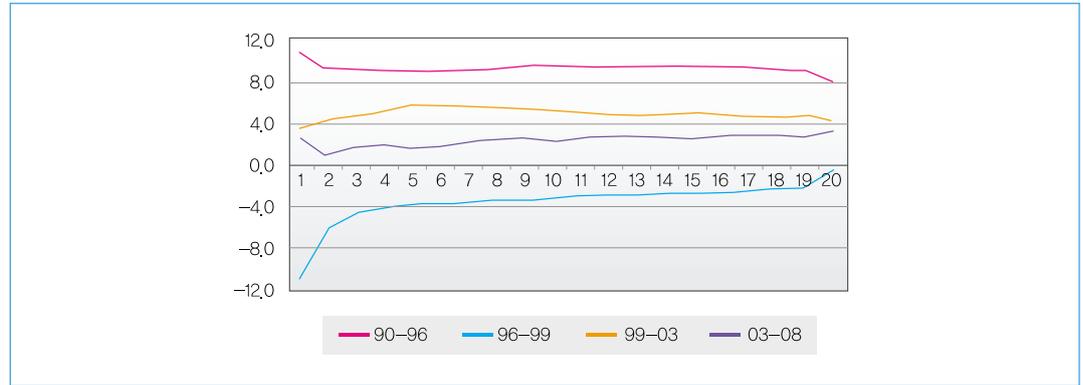
#### □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격차

- 1990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분위별 소득증가율 곡선이 완만한 우하향곡선의 형태를 띠.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빈부간의 소득격차는 축소됨
- 하지만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의 기간 동안 이러한 분위별 소득증가율 패턴은 정 반대의 양상을 보임. 경제위기의 충격이 하위소득계층에 훨씬 크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줌
- 1999년에서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다시 분위별 소득증가율 곡선이 완만하나마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 그러나 특징적인 점은 이 기간 동안에도 하위 6개 분위 사이에는 소득증가율의 역진성이 관측됨. 소득증가패턴의 역진성이 일부 해소되었더라도 그 효과는 중간 소득층에서 주로 나타날 뿐, 하위 소득층의 상대적 소득지위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었음

○마지막으로 2003년 이후의 시기에서는 다시 소득증가율의 역진성이 나타나서 하위 소득분위의 소득증가율이 상위 소득분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림5] 도시가구의 20개 분위의 기간별 실질시장소득 증가율 비교

(단위: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이와 같은 분배 패턴이 지속된다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표 1] 도시가구 20개 분위의 기간별 평균 실질시장소득 증가율

(단위: %)

분위	기간	1990~1996	1996~1999	1999~2003	2003~2008	1990~2008	1997년 수준 회복에 걸린 기간(년)
1		10.3	-11.0	3.3	2.4	2.7	11+
2		8.8	-5.9	4.2	0.9	3.0	11+
3		8.8	-4.6	4.6	1.6	3.5	11+
4		8.7	-4.1	4.9	1.7	3.7	6
5		8.6	-3.8	5.5	1.4	3.8	6
6		8.7	-3.8	5.7	1.6	3.9	6
7		8.9	-3.6	5.4	2.0	4.0	6
8		8.9	-3.5	5.3	2.2	4.1	6
9		9.2	-3.5	5.2	2.2	4.2	6
10		9.2	-3.4	5.0	2.3	4.1	5
11		9.2	-3.1	4.8	2.4	4.2	5
12		9.1	-2.9	4.7	2.6	4.2	5
13		9.2	-2.9	4.6	2.6	4.2	5
14		9.2	-2.8	4.7	2.4	4.2	5
15		9.2	-2.8	4.7	2.5	4.2	5
16		9.1	-2.6	4.6	2.5	4.3	5
17		9.0	-2.6	4.6	2.8	4.3	5
18		8.8	-2.4	4.5	2.7	4.2	5
19		8.7	-2.2	4.5	2.6	4.2	5
20		7.8	-0.5	3.9	3.1	4.2	4
전체평균		8.8	-2.8	4.7	2.4	4.1	6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가구 실질 시장소득이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데 걸린 기간

- 도시가구는 평균적으로 1997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 6년 소요
- 그러나 하위 3개 분위는 11년이 지난 2008년까지도 여전히 경제위기 직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4~9분위까지는 6년, 10~19분위까지는 5년, 그리고 20분위는 4년이 소요
- 한편, 4분위는 2004년부터, 5분위는 2006년부터 다시 실질소득이 1997년 이전의 수준으로 후퇴

#### 4. 극화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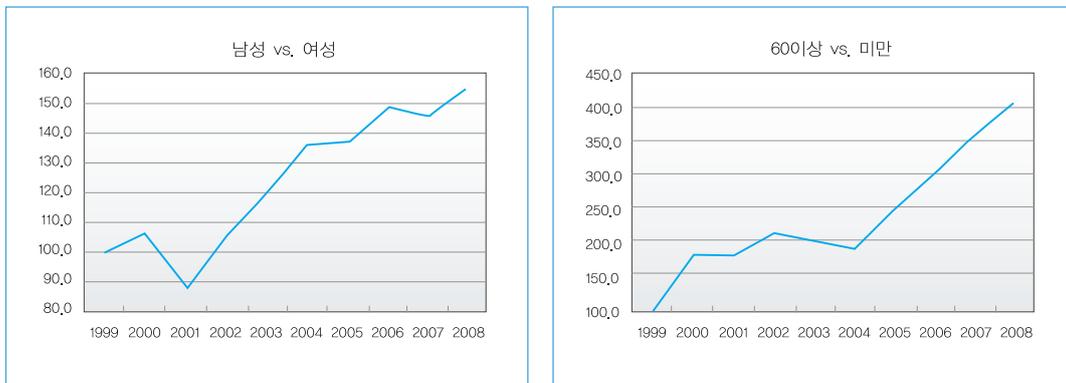
□ Esteban-Ray지수(이하, ER지수)는 집단 내 동질성과 집단 간 동질성 척도를 이용해 두 사회집단 간의 극화(polarization) 정도를 표현하는 바, 이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사회의 소득분배 양극화를 분석하려는 논의가 존재함

- 그러나 두 집단의 구분점이 내생적일 경우(예,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구분) 집단간 갈등에 대한 직관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따라서 가구의 비소득 특성(연령, 성별,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두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간의 극화 경향을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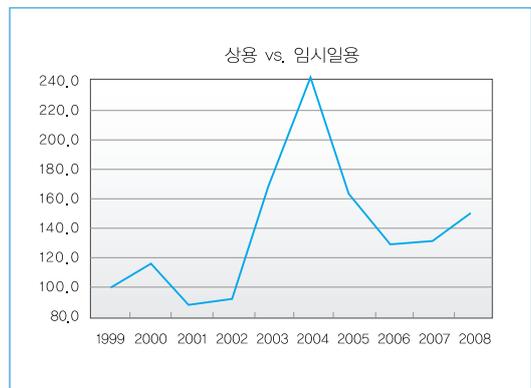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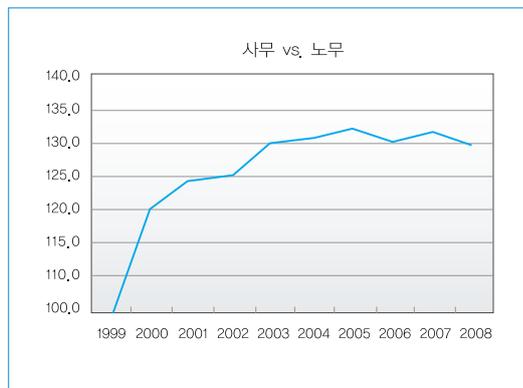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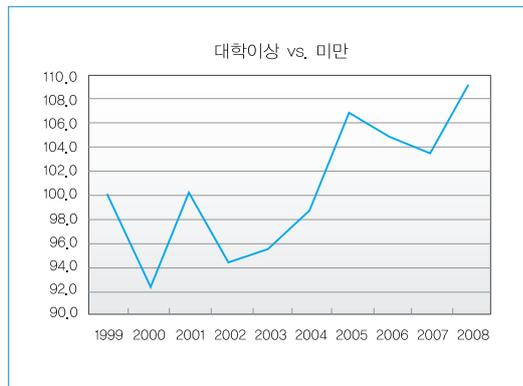
□ 1999년의 극화수준을 동일하게 100으로 보았을 때 모든 기준에 대해 집단 간 극화의 경향이 확대됨([그림 6])

- 특히 노인과 비노인, 사무직 근로자와 노무직 근로자 간의 양극화 경향은 1999년 이래로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음
- 인구사회학적 기준에 따른 취약집단과 비취약집단 사이의 소득 양극화 경향이 최근 들어 확대. 이와 같은 소득격차 경향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타 집단에 대한 이질감이 강화되고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 간의 양극화 경향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한편, 소득기준에 따라 두 집단을 구분할 경우, 평균소득이 아닌 다양한 소득구간 구분방법에 따른 ER 지수의 변화를 비교(〈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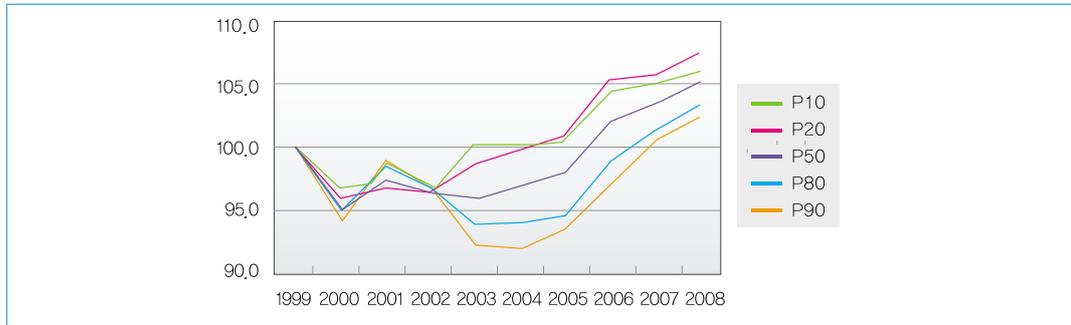
- 양극화 지수의 절대적 크기가 가장 크게 되는 지점은 P50이고 다음이 P80
- 양극화 지수의 증가속도 면에서 볼 때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P20으로 구분했을때의 ER지수이고 다음이 P10. 즉,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양극화 경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울기가 가장 급하게 나타나는 구간은 2005년부터 2007 사이의 시기임

〈표 2〉 도시가구 소득구간 구분점별 ER지수 변화추이

연도 \ 집단구분점 (분위수)	P10	P20	P30	P50	P80	P90
1999	0.0838	0.1407	0.1832	0.2330	0.2023	0.1460
2000	0.0811	0.1350	0.1749	0.2212	0.1918	0.1377
2001	0.0813	0.1366	0.1782	0.2274	0.1992	0.1445
2002	0.0808	0.1356	0.1766	0.2246	0.1961	0.1415
2003	0.0840	0.1391	0.1789	0.2237	0.1899	0.1350
2004	0.0840	0.1409	0.1814	0.2262	0.1906	0.1345
2005	0.0843	0.1421	0.1818	0.2285	0.1918	0.1364
2006	0.0874	0.1481	0.1915	0.2383	0.1999	0.1416
2007	0.0880	0.1487	0.1936	0.2413	0.2051	0.1470
2008	0.0889	0.1515	0.1960	0.2451	0.2090	0.1497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그림 7] 도시가구 소득구간 구분점별 ER지수 변화추이 비교(1999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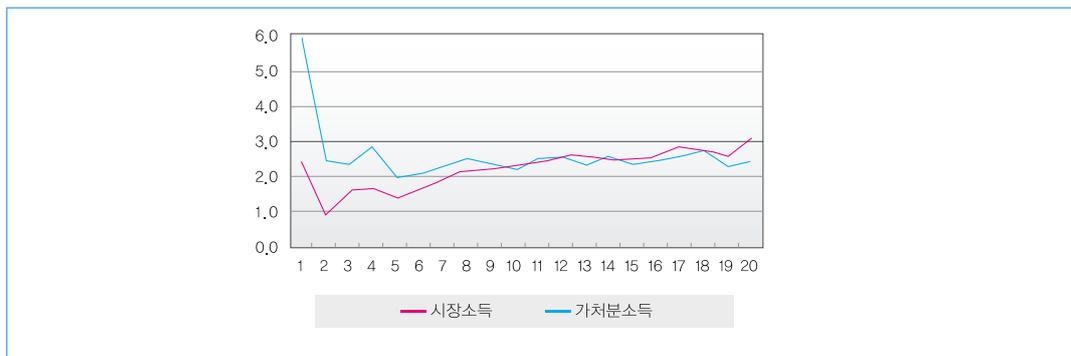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5.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정책적 함의

[그림 8] 2003-2008년간 소득분위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비교

(단위: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 2003-2008년간 시장소득 증가율과는 달리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중하분위에서 역진적인 소득증가율 양상이 다소 덜 나타남

- 분배구조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저소득층의 시장소득 증가율 저조에 있는 만큼, 하위소득계층의 취업을 늘리고 저임금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한편, 정부의 개입이 소득증가의 분위간 역진성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의 여지도 있음
- 두 곡선의 차이, 즉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1/20분위에서 매우 크고 2/20분위에서 큰 폭으로 줄어듦. 2/20분위의 계층은 3/20분위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낮은 반면 1/20분위에 비해 재정지출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음. 특히 2/20분위는 최근 5년간의 실질 시장소득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도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계층적 상승을 도모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계층임
- 따라서 1/20분위에 집중되고 있는 지원을 2/20분위까지 확대해 나가야 필요가 있음. 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범주적 현금급여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5/20분위부터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급여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강신욱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2-380-813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